

일본정부, 대지진 피해를 반영한 정책개선 추진

일본정부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신성장전략」의 중점과제를 수정하여 금번 대지진으로 야기된 전력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책추진을 위한 전체 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산업공동화 방지, 재정건전화 추진 등을 우선과제로서 추진할 예정

- 일본정부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개선하는 「정책추진을 위한 전체 지침」 원안을 마련(닛케이 4.27)
 - 겐바(玄葉 光一郎) 국가전략장관과 요사노(与謝野 馨) 경제재정장관은 이 원안과 관련해 28일 각료회의를 거쳐 연휴(4.29~5.8) 직후 정식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후 여름까지 「신성장전략」(2010년 6월 발표)을 수정할 예정
- 「신성장전략」 중의 정책개선 방향은 금번 대지진으로 인해 야기된 방사능 피해, 공급 제약, 장래 불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첫째,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산업공동화의 방지
 -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우대세제 도입,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취득 기간단축 등을 고려

- 현재까지 공장의 해외이전과 같은 생산거점 자체의 유출 사례는 없으나, 해외기업에의 생산위탁*으로 국내 전력부족에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히타치디스플레이가 대만의 치메이(奇美)전자에 생산위탁을 확대

○ 둘째,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방지

- 당분간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어려울 것이므로, ‘202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 이라는 당초 목표를 수정함.

○ 셋째, 재정건전화 추진

-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을 계속 검토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재정건전화 추진 방침을 강조

표 1. 「정책추진을 위한 전체 지침」 원안의 개요

| |
|---|
| <p>■ 일본의 성장률 하락 리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사선 피해 : 오염피해, 루머 피해 ② 공급 제약 : 전력부족, 공급망(supply chain) 단절 ③ 장래 불안 : 산업공동화 우려, 재정 불안정화 |
| <p>⇓ 리스크 회피를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p> |
| <p>■ 성장전략의 중점 정책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공동화 방지 전략 ②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방지 전략 ③ 해외와의 경제협력 ④ 농업재생 |
| <p>■ 재정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실시 ② 재정건전화 강화(“신뢰도가 일본의 운명을 쥐고 있다”) |

자료: 日本經濟新聞(2011.04.27)

- 그러나 현재의 원안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해외와의 경제협력’을 중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지만, 환태평양파트너십(TPP)에 대한 참가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이는 TPP에 대한 농업계 및 민주당 내 일부의 반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일본정부는 금년 6월까지 TPP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동 파트너십 관련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1. 4. 27)